

2019 경찰간부 기출문제 최윤경 행정학

[19년도 제68기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 행정학 정답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㉔	㉔	㉔	㉔	㉔	㉔	㉔	㉔	㉔	㉔	㉔	㉔	㉔	㉔	㉔	㉔	㉔	㉔	㉔	㉔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㉔	㉔	㉔	㉔	㉔	㉔	㉔	㉔	㉔	㉔	㉔	㉔	㉔	㉔	㉔	㉔	㉔	㉔	㉔	㉔

1. 다음 중 제3섹터(중간조직)의 형성배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계약실패이론은 서비스의 성격상 영리기업의 서비스 양과 질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할 때 비영리성을 띤 준(비)정부조직의 서비스를 더 신뢰하게 된다는 이론이다.
- ② 관청형성모형은 정책위주의 참모조직을 집행위주의 계선조직으로 개편하려는 의도가 작용하여 준정부조직이 형성하게 된다는 이론이다.
- ③ 공공재이론은 시장에서 공급되지 못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중간조직이 발생했다는 이론이다.
- ④ 소비자통제이론은 소비자인 시민이 국가권력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생하였다는 이론이다.

1. 정답 ②

- ② 관청형성모형은 합리적 고위관료들이 권력중심에 있는 부서에서 참모적 기능 수행을 선호하기 때문에 책임과 통제가 수반되는 일상적 기능을 준정부조직이나 외부계약(관청형성)으로 떼어낸다고 설명한다.

2. 경영과 구분되는 행정이 가지는 속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은 독점성 측면에서 경쟁자가 없다고 볼 수 있다.
- ② 행정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공권력을 배경으로 수행된다.
- ③ 행정은 목표달성을 위한 효율적 자원 활용을 위한 관리성을 갖는다.
- ④ 행정은 공익추구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적 성격을 갖는다.

2. 정답 ③

- ③ 행정과 경영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이다. 목표달성을 위한 효율적인 관리 활동이라는 점에서 행정과 경영은 유사성을 갖는다.

5. 규제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단규제는 정부의 규제 정도와 피규제자의 순응 정도를 파악하는 데 용이하다.
- ② 성과규제에서는 사회경제적으로 바람직한 최적의 성과 수준을 찾는 것이 어렵다.
- ③ 관리규제는 성과규제를 적용하기 어려울 때 적합하다.
- ④ 수단규제에서는 관리규제에 비해 유연한 규제설계가 가능해질 수 있다.

5. **정답** ④

- ④ 관리규제는 수단이나 성과가 아닌 과정을 규제하는 것으로,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이나 행위에 대해 사전적으로 규제하는 수단규제에 비해 피규제자에게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며, 피규제자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할 수 있다.

6. 다음 중 공익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신행정론의 등장으로 행정의 규범적 성격과 가치지향성을 강조하게 되어 공익이 강조되었다.
- ② 실체설은 공익이 사익과 상충되는 경우 사익은 당연히 희생되어야 한다는 전체주의적 입장이다.
- ③ 과정설은 공익은 선형적인 것이 아니라 특수이익이 민주적 조정과정을 통해 조정되는 입장으로 파악한다.
- ④ 민주화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집단이기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정설의 입장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6. **정답** ④

- ④ 과정설은 공익형성과정에서 집단이기주의의 발생과 소수 몇몇 집단에 의해 주도될 가능성(조직화되지 못한 사회적 약자의 이익이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민주화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나친 집단 이기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공익에 대한 실체설적인 입장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7. 공무원 개인의 가치와 태도를 토대로 하여 공직사회 전체의 부패정도를 설명할 때 발생하는 오류는?

- ① 분할의 오류 ② 표본추출 오류 ③ 합성의 오류 ④ 통계적 회귀 오류

7. **정답** ③

- ③ 합성의 오류는 “부분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것을 전체에 부당하게 적용하거나 또는 개별적인 요소에 해당되는 것을 집합 전체에 부당하게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분할의 오류(fallacy of division)는 “어떤 대상에 대하여 집단적으로 말할 수는 있어도 이것을 그 부분이나 구성요소에 작용하면 옳지 못한 경우”를 가리킨다.

8. 오스본(Osborne)과 게블러(Gaebler)의 「정부재창조론」에서 제시된 기업가적 정부의 운영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업가적 정부는 예산지출 위주의 정부운영 방식에서 탈피하여 수익창출을 중시한다.
- ② 기업가적 정부는 리더십을 발휘하여 직접적인 서비스 공급자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 ③ 기업가적 정부는 법규나 규정에 의한 관리보다는 목표와 임무를 중심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결과를 중시한다.
 ④ 기업가적 정부는 권한 분산과 하부 위임을 통해 참여적 의사결정을 중시한다.

8. **정답** ②

- ② 기업가적 정부는 서비스 공급자보다는 촉매 작용자, 중개자, 그리고 촉진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노ذج기보다 방향잡기)

9. 현상학과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가. 인본주의	나. 가치와 사실의 구분	다. 상호주관성 중시
라. 순수과학적 연구	마. 철학적 연구방법	바. 새정치행정이원론
사. 반실증주의	아. 능동적·사회적 자아	자. 표출된 행위(behavior)

- ① 가, 다, 라, 사 ② 가, 다, 마, 바 ③ 다, 마, 사, 아 ④ 다, 마, 사, 자

9. **정답** ③

- ☞ 가. 인본주의(○), 다. 상호주관성 중시(○), 마. 철학적 연구방법(○), 사. 반실증주의(○), 아. 능동적·사회적 자아(○)
 ☞ 나. 가치와 사실의 구분 (×), 라. 순수과학적 연구(×), 바. 새정치행정이원론 (×), 자. 표출된 행위(behavior)(×)는 행태주의의 특징에 해당한다.

10. 다음 중 정책과 정책유형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가. 최저임금제	나. 항공노선 배정	다. 신공항건설	라. 실업수당
가	나	다	라
① 경쟁적규제정책	분배정책	재분배정책	보호적규제정책
② 재분배정책	구성정책	분배정책	보호적규제정책
③ 보호적규제정책	경쟁적규제정책	분배정책	재분배정책
④ 보호적규제정책	분배정책	구성정책	재분배정책

10. **정답** ③

- 가. 최저임금제 - 보호적 규제정책 (일반 국민들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를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정책)
 나. 항공노선 배정 - 경쟁적 규제정책 (다수의 경쟁자들 중에서 특정자격을 갖춘 몇몇 개인이나 집단에게 일정한 제거나 용역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정책)
 다. 신공항건설 - 분배정책 (공공 서비스, 권리, 혜택 등을 사회의 특정 부분에 분배하는 정책)
 라. 실업수당 - 재분배정책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의 소득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

11. Porter와 Lawler의 성과(업적)-만족이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 가. 직무성과는 내재적·외재적 보상을 가져오며, 이 관계는 불완전하게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나. 내재적·외재적 보상이 있더라도 그것이 불공평하다고 지각되면 개인에게 만족을 줄 수 없다.
 다. 외재적 보상은 조직의 통제 하에 있는 보상으로 보수·승진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라. 내재적 보상은 직무성과에 대해 개인이 스스로 얻는 보상으로 근무환경·안전 등이 포함된다.
 마. 개인이 기대하는 보상의 양은 만족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개인이 실제로 받는 보상의 양만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

- ① 가, 나, 다 ② 가, 다, 마 ③ 가, 나, 라 ④ 다, 라, 마

11. **정답** ①

가, 나, 다(○)

- 라. (×) 내재적 보상은 직무성과에 대해 개인이 스스로 얻는 보상으로 직무자체로부터 느끼는 성취감 등이 해당된다. 근무환경·안전 등은 외재적 보상의 예에 해당된다.
 마. (×) 개인이 실제로 보상 받는 양뿐만 아니라 기대하는 보상의 양 또한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

12. 정책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구성적 타당성은 정책효과의 측정을 위해 충분히 정밀한 연구 설계가 이루어진 정도를 말한다.
 ② 성숙효과는 실험기간 중 실험집단의 특성이 변화함으로써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며, 외적 타당성 저하요인이다.
 ③ 호돈효과는 조건이 양호한 집단을 대상으로 정책수단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으로 외적 타당성 저하요인이다.
 ④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상 특정평가는 국무총리가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평가하는 것이다.

12. **정답** ④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특정평가"라 함은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 ① (×) 구성적 타당성은 이론적 구성요소들을 측정하고자 구성된 척도가 측정대상을 실질적으로 측정해내는 정도를 의미한다. 정책의 결과를 측정하기 위해 연구설계가 정밀하고 강력하게 이루어진 정도는 통계적 결론의 타당성이다.
 ② (×) 성숙효과는 내적타당성 저하요인이다.
 ③ (×) 조건이 양호한 집단을 대상으로 정책수단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으로 외적 타당성 요인은 크리밍(creaming) 효과이다. 호돈효과는 실험집단 구성원이 실험 대상이라는 인식 때문에 평소와는 다른 특별한 행동을 보이는 경우 이로부터 얻어진 결과를 일반화하기 곤란한 것을 의미한다.

13. 비용편익분석과 비용효과분석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비용효과분석에서 효과는 물건이나 용역의 단위 또는 측정 가능한 효과로 나타내어진다.
- ② 비용편익분석은 경제적 합리성을 강조하지만 비용효과분석은 기술적 합리성을 강조한다.
- ③ 비용효과분석은 총효과가 총비용을 초과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직접적 증거는 제시하지 못한다.
- ④ 비용효과분석은 측정대상이 이질적이어도 효과성만으로 비교분석이 가능하다.

13. **정답** ④

④ 비용효과분석은 측정대상이 유사하거나 동일한 목적을 가진 프로그램들을 비교할 수 있다.

14. 아래에 제시된 정책결정 모형인 쓰레기통 모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가. '불명확한 기술'이란 정책 행위자들이 정책문제에 대하여 모호하게 정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 '문제성 있는 선호'란 정책 행위자들의 선호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 '유동적 참여'란 정책 참여자들이 정책 과정에 있어 부분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 정책결정에 필요한 요소로 문제의 흐름, 해결책의 흐름, 선택기회의 흐름, 참여자의 흐름이 있으며, 이 흐름들이 상호 연관되어 결합될 때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

- ① 가, 나 ② 나, 다 ③ 다, 라 ④ 가, 라

14. **정답** ②

가. (×) '불명확한 기술'이란 정책 행위자들이 목표를 정확히 알았다 하더라도 이를 달성할 인과 관계의 수단이나 기술이 명확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나. (×) 정책결정에 필요한 요소로 '문제', '해결책', '참가자', '선택기회'의 네 요소가 서로 독립적으로 여기저기 표류하다가 어느 시점에 우연히 모두 마주치는 경우에 이루어진다고 설명한다.

15. 드로(Dror)의 최적모형에서 설명하는 상위정책 결정 단계와 관련이 없는 요소는?

- ①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동기부여
- ② 자원의 조사, 처리 및 개발
- ③ 정책 결정 체제의 설계, 평가 및 재설계
- ④ 문제, 가치 및 자원의 배분

15. **정답** ①

① 정책집행을 위한 동기부여는 정책결정 이후(post-policy making) 단계에 해당한다.
 ☞ 상위정책결정(meta-policy making) 단계는 '정책결정에 대한 정책결정'으로서 바람직한 정책결정을 위한 전략을 결정하는 단계이다. 정책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관한 정책결정, 즉 결정참여자, 시기, 결정을 위한 조직과 비용, 결정방식들을 미리 결정함으로써 정책과 관련된 가치, 자원 등을 확인하고 그것을 정책결정기관에 할당한다.

16. 정책딜레마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안들이 상충되고 각각 기회손실이 비슷한 경우에 발생한다.
- ② 갈등 집단들의 내부 응집력이 강할 때 딜레마가 증폭된다.
- ③ 갈등 당사자들이 정책결정의 회피나 지연을 조장한다.
- ④ 정책문제의 재규정은 딜레마 상황에 대한 적극적 대응방식이다.

16. 정답 ③

- ③ 갈등당사자들이 정책대안의 지연이나 회피를 용납하지 않을 때, 딜레마의 상황이 증폭된다.
- ① 정책딜레마는 정책대안들이 구체적이고 명료하지만, 대안들간에 상호절충이 불가능 하며, 각 대안들의 기회손실이 비슷한 경우 발생한다.

17. 립스키(M. Lipsky)의 일선관료제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일선관료들은 서비스 제공에 있어 상당한 재량권을 보유한다.
- ② 자원은 만성적으로 부족하며 서비스 수요는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 ③ 객관적 성과평가의 기준이 명확하여 목표달성을 지향하는 성과의 측정이 용이하다.
- ④ 일선관료는 집행에 필요한 자원이 부족할 경우 대체로 부분적이고 간헐적으로 정책을 집행한다.

17. 정답 ③

- ③ 일선관료의 업무수행을 평가하는 객관적 성과평가 기준이 결여되어 있다.

18. 아래에 제시된 조직구조 특성 중 유기적 구조의 특성은 모두 몇 개인가?

가. 분업적 과제	나. 성과측정이 용이	다. 넓은 직무 범위
라. 표준 운영절차	마. 권위의 정당성 확보	바. 예측가능성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8. 정답 ①

- ① 다. 넓은 직무 범위
- ☞ 기계적 구조(mechanistic structure)는 직무의 기능별 분업과 전문화, 높은 공식화로 예측 가능성이 높으며, 집권적 구조, 좁은 직무 및 통솔범위를 특징으로 하는 조직으로, 관료적 조직이 해당된다. 반면에 유기적 구조(organic structure)는 직무내용을 공식적으로 규정한 정도가 낮고, 변화에 대한 적응을 강조하며, 낮은 집권화(분권), 광범위한 직무 및 넓은 통솔 범위, 팀워크 등을 특징으로 하며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뛰어나다.

19. 대프트(Daft)의 조직유형 중 사업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구성원들의 분업을 통해 지식과 기술을 통합적으로 활용하므로 부서와 구성원들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다.
- ② 특정 산출물별로 운영되므로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고 성과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여 성과관리에 유리하다.
- ③ 조직구성원들에게 자율관리, 의사결정권과 책임을 위임함으로써 사기와 직무동기 부여에 기여한다.
- ④ 특정기능별로 최고의 품질과 최저비용의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으면서 매우 간소화된 조직구조를 유지할 수 있다.

19. 정답 ②

- ① 기능구조에 대한 설명이다.
- ③ 수평구조(팀 조직)의 특성이다.
- ④ 네트워크 조직에 대한 설명이다.

20. 아지리스의 동기부여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머슬로의 5단계 욕구계층설을 수정해 인간의 욕구를 존재, 관계, 성장의 3단계로 나눈다.
- ② 인간의 욕구를 불만과 만족이라는 상호 독립적인 이원적 구조로 파악하면서, 만족의 반대를 만족이 없는 상태로, 불만족의 반대를 만족이 아니라 불만족이 없는 상태로 규정한다.
- ③ 동기가 개인이 사회문화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취득되고 학습을 통해 개발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개인의 욕구 중 사회문화적으로 학습된 욕구들을 성취욕구, 권력욕구, 친교욕구로 분류했다.
- ④ 공식조직이 개인의 행태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통해 인간은 미성숙상태에서 성숙상태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성격 변화를 경험한다는 점을 주장했다.

20. 정답 ④

- ① 앨더퍼의 ERG이론에 대한 설명
- ② 허즈버그의 이요인 이론에 대한 설명
- ③ 맥클리랜드의 성취동기이론에 대한 설명

21. 직위분류제의 용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직위(position) — 한 사람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
 나. 직렬(series) — 직무의 종류는 물론 직무수행의 곤란도와 책임도가 모두 유사한 직위의 집단
 다. 직군(group) — 직무의 종류는 다르지만 직무수행의 곤란도와 책임도가 유사한 직무들을 묶은 것
 라. 직류(sub-series) — 동일한 직렬 내에서의 담당분야가 유사한 직무의 군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1. 정답 ②

② 가. 라. (○)

나. (×) 직급에 대한 설명이다. 직렬(series)은 직무의 종류는 유사하나 곤란도·책임도가 상이한 직급의 군을 의미한다.

다. (×) 등급에 대한 설명이다. 직군(group)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집합을 의미한다.

22.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부가 직접 생산하되 수단은 민간의 시장요소를 도입한 것이다.
- ② 신공공관리론 원리에 의해 등장한 새로운 형태의 민영화 수단이다.
- ③ 담당하는 정책에 대해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한다.
- ④ 일반행정기관과 비교할 때 예산과 인사관리의 재량권이 있다.

22. 정답 ②

② 책임운영기관은 신공공관리론 원리에 의해 등장한 새로운 형태의 정부조직이며, 민영화 수단은 아니다. 책임운영기관은 행정기관이며, 소속 직원의 신분도 공무원이다. 다만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 중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무에 대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을 의미한다.

23. 거시조직이론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 가. 구조적 상황론에 따르면 환경의 영향에 대한 조직관리자의 역할이 수동적이다.
- 나. 자원의존이론에 따르면 조직은 주도적·능동적으로 환경에 대처하며 그 환경을 조직에 유리하도록 관리하려는 존재이다.
- 다. 대리인 이론에 따르면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이 발생할 수 있다.
- 라. 거래비용이론에 따르면 시장의 자발적인 교환행위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이 관료제의 조정비용보다 클 경우 거래를 외부화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 마. 전략적 선택이론에 따르면 조직구조의 변화가 외부환경 변수보다는 조직 내 정책결정자의 상황판단과 전략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 ① 가, 나, 다, 라 ② 가, 나, 다, 마 ③ 가, 다, 라, 마 ④ 나, 다, 라, 마

23. 정답 ②

라. (×) 거래비용이론에 따르면 시장의 자발적인 교환행위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이 관료제(계층제)의 조정비용보다 클 경우 거래를 내부화(외부화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즉 시장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이 조직내부의 관리비용보다 클 경우 시장을 대신하여 계층제적인 기업조직이 생긴다고 본다.

24. 정책의제 설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일반적으로 정책의제는 정치성, 주관성, 동태성을 지닌다.
- ② 정책효과가 있는데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2중오류라 한다.
- ③ 정부 내 정책결정자들이 주도하여 정책의제화를 하는 경우를 허쉬만은 ‘강요된 정책문제’라 하였다.
- ④ 일반대중이 정부가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공감하는 문제를 체제의제라 한다.

24. **정답** ③

- ③ 허쉬만의 ‘강요된 정책문제’는 정부 외부 집단의 주도에 의해 문제가 제기되어 정책의제화 되는 외부주도형을 의미한다.

25. 아래의 표에서 제시된 공공서비스의 성과지표와 산출방법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성과지표	경찰부서의 산출방법
투 입	조사활동에 투입된 경찰 및 차량 규모
과 정	A
산 출	B
결 과	C
영 향	D

가. 범죄율 감소 나. 범인 체포 건수 다. 담당 사건 수 라. 지역사회 안전성

- ① A-다, B-가, C-라, D-나 ② A-다, B-라, C-나, D-가
- ③ A-다, B-나, C-라, D-가 ④ A-다, B-나, C-가, D-라

25. **정답** ④

- A. 과정 : 다. 담당 사건 수 - 업무 처리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지표
- B. 산출 : 나. 범인 체포 건 수 - 생산과정에서 창출된 직접적인 생산물을 의미
- C. 결과 : 가. 범죄율 감소 - 산출물이 창출한 조직 환경에서 직접적인 변화를 의미
- D. 영향 : 라. 지역사회 안전성 - 조직 혹은 사업의 궁극적인 사회·경제적 효과를 의미

26.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근무성적평정 요소에는 직무수행실적과 개인의 능력 외에 태도도 포함할 수 있다.
 나. 목표관리제 평정법은 목표달성도를 측정하여 개인의 실적을 평가하는 것으로, 개인 간 비교에 용이하다.
 다. 도표식 평정척도법은 과학적 직무분석에 기초하여 평정의 결과가 점수로 환산된다.
 라. 평정오류 중 집중화 경향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강제배분법이 활용될 수 있다.
 마. 우리나라는 이중평정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다면평정결과를 근무성적평정에 반영하고 있다.
 바.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자와 피평가자의 사전협의는 금지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6. 정답 ②

가. (○) 근무성적평정 요소에는 직무수행실적과 개인의 능력 외에 태도도 포함할 수 있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근무성적평가의 평가항목 등)

① 근무성적평가의 평가항목은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으로 하되,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직무수행태도 또는 부서 단위의 운영 평가 결과를 평가항목에 추가할 수 있다.

나. (×) 목표관리제 평정법은 목표달성도를 측정하여 개인의 실적을 평가하는 것으로, 개인간 비교는 곤란하다.

다. (×) 도표식 평정척도법은 일반적으로 직무분석에 기초하기보다 직관과 선험을 바탕으로 평가 요소가 결정되기 때문에 평정요소의 합리적 선정이 어렵고, 평정요소와 등급의 추상성이 높기 때문에 평정자의 자의적 해석에 의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쉽다.

마. (×) 우리나라는 이중평정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다면평정결과는 2010년부터는 승진, 전보, 성과급 지급 등 통제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보다는 역량개발 및 교육훈련과 같은 능력발전 목적으로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바. (×)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자와 피평가자의 사전협의와 의견교환이 필요하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성과면담 등)

① 평가자는 근무성적평정이 공정하고 타당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과 성과면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평가자는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의 소관 업무 추진상황 및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평가 대상 기간 중에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의 성과목표 수행과정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④ 평가자가 성과계약등 평가 또는 근무성적평가 정기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평정 대상 기간의 성과목표 추진결과 등에 관하여 근무성적 평정 대상 공무원과 서로 의견을 교환하여야 한다.

27. 예산의 원칙 중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해야 한다.’를 의미하는 원칙은?

- ① 예산 통일의 원칙 ② 예산 총계주의 원칙 ③ 예산 단일성의 원칙 ④ 예산 한정성의 원칙

27. 정답 ②

국가재정법 제17조 (예산총계주의)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제53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28. 직업공무원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직업공무원제는 실적주의의 확립을 필요조건으로 한다.
 ② 직업공무원제는 직위분류제와 폐쇄형 임용체계를 중요시 한다.

- ③ 직업공무원제는 행정의 지속성,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기여한다.
- ④ 직업공무원제는 인재 채용시 학력과 연령을 제한한다.

28. 정답 ②

- ② 직업공무원제는 젊고 유능한 인재가 공직에 임용되어 정년까지 보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보장하기 위해 내부승진을 주로 활용하는 폐쇄형 임용을 특징으로 하는 계급제와 친화성을 갖는다.

29. 중앙인사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독립합의형(위원회형) 중앙인사기관의 장점은 의사결정의 신속화에 있다.
- ② 한국의 중앙인사기관인 인사혁신처는 비독립단독형(부처조직형)이다.
- ③ 비독립단독형(부처조직형) 중앙인사기관의 장점은 책임소재의 명확화에 있다.
- ④ 독립합의형(위원회형) 중앙인사기관을 통해 타 기관과의 밀착을 방지하고 원만한 관계를 설정할 수 있다.

29. 정답 ①

- ① 독립합의형은 다수의 위원들 간의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지연될 수 있다.

30. 직무평가 기법에 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가. 분류법은 직무 전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등급기준표와의 비교를 통해 등급을 결정한다.
 나. 요소비교법은 대표적인 기준직무(key job)와 평가직무를 비교하는 비계량적 평가법이다.
 다. 서열법은 직무를 총괄적으로 평가하여 서열을 결정하는 비계량적 평가법이다.
 라. 분류법과 점수법은 직무와 등급기준표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분류법은 계량적, 점수법은 비계량적 평가를 시행한다는 차이가 있다.

-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다, 라 ④ 나, 라

30. 정답 ④

- 나. [×] 요소비교법은 대표적인 기준 직무를 정해놓고 기준 직무의 요소별로 부여된 수량적 가치와 비교 직무의 평가요소들을 비교하여 평가하는 계량적 평가법이다.
- 라. [×] 분류법과 점수법은 직무와 등급기준표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분류법은 비계량적인 평가방법이고 점수법은 계량적 평가방법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31. 공직 윤리 및 행동규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부패행위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직부패 방지를 위해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 ③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는 적용대상 공직자의 퇴직 후 5년간 그가 퇴직 이전에 3년간 속해있던 소속부서나 기관과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기관으로의 취업을 제한한다.
- ④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산공개대상자등 및 그 이해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직무관련성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를 둔다.

31. 정답 ④

- ① 공무원의 부패행위 신고 의무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 ②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은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되어 있다.
- ③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으로의 취업을 제한한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록의무자(이하 이 장에서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취업제한기관"이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2.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중층제에서는 단층제에서보다 기초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다.
- ② 중층제는 국가의 감독기능 유지를 어렵게 한다.
- ③ 단층제는 중층제보다 중복행정으로 인한 행정지연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
- ④ 단층제는 중앙집권화의 우려가 크다.

32. 정답 ②

- ② 중층제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상급지방자치단체가 일차적 감독기관의 역할을 함으로써 국가의 감독기능을 원활하게 한다.

33. 예산의 형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본예산이란 행정부가 편성하여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성립되는 예산을 의미한다.
- ② 추가경정예산이란 예산안이 국회의 의결을 거쳐 성립된 후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하는 예산이다.
- ③ 우리나라는 1960년부터 준예산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지출항목은 한정적이다.
- ④ 잠정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의결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의회가 미리 1개월분 예산만 의결해 정부로 하여금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을 의미한다.

33. 정답 ④

- ④ 잠정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의결되지 않은 경우에 정부가 잠정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으로 별도의 기간 제한이 없다.

34. 총액배분·자율편성 예산제도(Top-down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향적 예산편성과 달리 각 부처 내 예산담당기관의 예산조정과 삭감기능이 약화된다.
- ② 예산 총액이 먼저 결정된 후 분야별 예산의 배분이 결정된다.
- ③ 예산 운영에 관한 장기적인 전망과 계획이 필요하다.
- ④ 자금관리의 분권화를 강조하지만 의사결정의 주된 흐름은 하향적이다.

34. 정답 ①

- ① 하향적 예산편성제도로 부처별 지출 한도 내에서는 부처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사업별 예산규모를 결정할 수 있고, 책임성과 권한이 강화된다. 이것은 각 부처 내 예산담당기관의 예산조정과 삭감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35. 정부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복식부기는 대차평균의 원리에 의해 자기검증기능을 갖는다.
- ② 현금주의는 자의적인 회계처리가 불가능하여 통제가 용이하다.
- ③ 복식부기에서 자산의 감소는 대변에 위치한다.
- ④ 발생주의는 무상거래를 비용으로 인식한다.

35. 정답 ④

- ④ 발생주의는 무상거래를 이중거래로 인식한다.

36. 다음의 예산집행의 목표를 구현하는 수단 중 신축성 확보방안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예산의 재배정	나. 총액계상예산	다. 예산의 전용
라. 계속비	마. 총사업비 관리	바. 예비타당성 조사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6. 정답 ③

- ③ 나, 다, 라

가. 예산의 재배정, 마. 총사업비 관리, 바.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는 예산의 통제 수단이다.

37.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세계 최초로 실시한 도시는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레(Porto Alegre)시이다.
- ② 우리나라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 ③ 우리나라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시행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이다.
- ④ 우리나라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들이 예산심의과정에 참여한다.

37. **정답** ④

④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들이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는 제도이다.

38.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국가사무를 집행하고자 중앙부처가 설치하는 일선기관이다.
- ②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관할지역 주민들의 직접적인 통제와 참여가 용이하기 때문에 책임행정을 실현할 수 있다.
- ③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국가사무의 효율적이고 광역적 수행을 용이하게 한다.
- ④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부처의 감독을 용이하게 하는 반면, 부처이기주의를 초래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38. **정답** ②

②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이 지방에 설치한 것으로 지역주민과 지방의회의 통제와 참여가 어렵기 때문에 책임행정과 지방자치 실현에 장애가 된다.

39. 행정통제 중 내부통제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사법부에 의한 통제	나. 교차 기능조직에 의한 통제
다. 시민에 의한 통제	라. 공무원으로서의 직업윤리
마.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한 통제	바. 옴부즈만에 의한 통제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9. **정답** ③

③ 나, 라, 마

가. 사법부에 의한 통제 - 외부 통제 수단

나. 교차 기능조직에 의한 통제 - 내부통제수단

다. 시민에 의한 통제 - 외부통제수단

라. 공무원으로서의 직업윤리 - 내부통제수단

마.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한 통제 - 내부통제수단

바. 옴부즈만에 의한 통제 - 스웨덴에서 발전한 옴부즈만 제도는 의회 소속의 외부통제수단

40.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우리나라 주민참여제도는 「주민조례개폐청구제 → 주민투표제 → 주민소환제 → 주민소송제」 순으로 법제화되었다.
- ② 주민투표의 효력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투표결과가 공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
- ③ 주민소환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비례대표 시·도의원을 대상으로 하며, 임기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청구할 수 없다.
- ④ 주민소송은 주민의 감사청구를 전심절차로 하며, 다수 주민의 연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40. 정답 ④

지방자치법 제16조 (주민의 감사청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도는 500명,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連署)로, 시·도에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방자치법 제17조 (주민소송)

①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임차·도급 계약이나 그 밖의 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한 사항 또는 지방세·사용료·수수료·과태료 등 공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사항을 감사청구한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감사청구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 위법한 행위나 업무를 게을리 한 사실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사항의 사무처리에 관한 권한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① [X] 우리나라 주민참여제도는 「주민조례개폐청구제(1999년) → 주민투표제(2004년) → 주민소송제(2005년) → 주민소환제(2007년)」순으로 법제화되었다.
- ② [X] 주민투표의 효력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투표결과가 공표된 날부터 14일 이내(20일 X) 이내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

주민투표법 제25조 (주민투표소송 등)

① 주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주민투표권자는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결과가 공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하여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특별시·광역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

- ③ [X] 비례대표 의원은 주민소환 투표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자치법 제20조 (주민소환)

①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8조 (주민소환투표의 청구제한기간)

제7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없다.

- 1.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 2.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만료일로부터 1년 미만일 때
- 3. 해당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한 날부터 1년 이내인 때